

[조선일보] 法대로 해야 차이나 머니 잡는다

[조선일보] [기고] 法대로 해야 '차이나 머니' 잡는다

양필승 다오지중화 한국법인 대표·전 건국대 교수

2011.10.28

중국 돈이 세계에 넘친다. 올 상반기에만 대일(對日) 투자액이

321 억엔으로 지난 10 년간 중국이 일본에 투자한 총액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중국의 해외투자 열풍은 이렇듯 광풍(狂風) 수준임에도

한국만은 열외다.

중국의 대한(對韓)투자는 쌍용차 인수를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급속히 냉각됐다. 쌍용차 사태는 한국에선 중국 기업이 싼값에 기술만

빼가고 회사를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중국 언론들은 강성노조의 반발

때문에 회사를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손을 든 해외투자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기술 유출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갔으나, 우리 법원의 판단은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랐다. 법적으로는 심각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단순한 원칙이 통해야 세계화는 진전된다.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하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구분이나, 토종자본과 해외자본의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돈은

주인에 관계없이 둥글기 때문에 돌게 돼 있는 것으로, 억지로 차별하면

편법만 난무하거나 아예 돈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지름길은 다름 아니라 '법대로'의 제도와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는 것이다.

쌍용차 사례는 노조라는 이해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중국기업의 첫 번째 한국 진출 사례였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도 더욱 심화됐던 것이다. 사실 쌍용차는 누가 인수했어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그 갈등 과정에서 법보다 감정이 앞섰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막연하게 강성노조 때문에 대한(對韓) 투자를 꺼린다는 변명거리만 주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법당국이 '법대로'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점을 부각시켜 중국의 한국 투자 열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며, 중국 기업도 현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한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중국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을 중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를 통해 촉구한 바 있다.

쌍용차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법대로'의 원칙이 확립돼야 우리 기업과 노조,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화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실정법'을 '국민정서법'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세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무역과 더 많은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최근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에서도 쌍용차의 악몽이 떠오른다. 외국기업은 막연히 '떡튀'일 것이라는 '국민정서법'이 다른 어떤 원칙보다 앞서고 있다. 그야말로 '법대로' 진행되거나 법의 테두리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이

도종기업과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법대로 감시받는다면 그때 비로소 '안으로 들이는 세계화'가 실현되는 셈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금융선진화도 이루어진다.

외환은행 처리도 법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쌍용차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선진국민으로서의 생활태도이고 세계화 시대의 생활문화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8/2011102802617.html